

##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 결의문

의안 번호	1422
----------	------

제출년월일 : 2012. 8.

발 의 자 : 정태갑, 강명권, 김기자, 김현식,  
류호담, 서성식, 송석호, 안희균,  
양승모, 윤범로, 이재문, 이종구,  
이호영, 최근배, 천명숙, 천윤옥,  
최용수, 허영옥, 홍진옥

### 1. 제안이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벌 유통업체들의 오만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과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대형유통업체

나. 결의내용

- 대형유통업체의 반사회적 영업행위 중단 촉구

덧붙임 : 결의문 1부. 끝.

# 결 의 문

**대형유통업체는 반사회적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의무휴업일을 즉각 시행하라!**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규모가 위축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재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로 인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22만 충주시민은 통탄을 금치 못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벌 유통업체들은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매출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며, 더욱이 한·EU간 FTA 협정과 한·중간 FTA가 발효되면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지역상권은 고사직전에 이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재벌 유통업체의 탐욕과 독점으로 인해 경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어 지역경제의 자생력과 유통 생태계는 점점 파괴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대형 유통업체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정에 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입점 허가제나 영업품목 제한 등 유통업에 실질적인 규제나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빠져 있어 영세 상인들을 살리고 균형있는 유통체제를 통한 소득분배의 실현은 꿈에도 찾아볼 수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19명 의원 전원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는 우리나라의 유통체제를 바로잡고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인 중소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형 유통업체는 법적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법으로 지정된 의무 휴업일을 지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형 유통업체가 법적소송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골목상권·전통시장·영세상인 등의 보호를 위해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하나,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오만한 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 충주시의회는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2012. 8. 30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